

자료명	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지원과제 조사
엠바고	2월 28일(火)자 朝刊부터(통신, 인터넷 등은 2/27(月) 12:00부터)
문의처	탄소중립실 김녹영 실장(010-3001-9667), 이시형 과장(010-9920-0745)

## ‘탄소중립이 기회다’... 1년 새 기업인식 확 바뀌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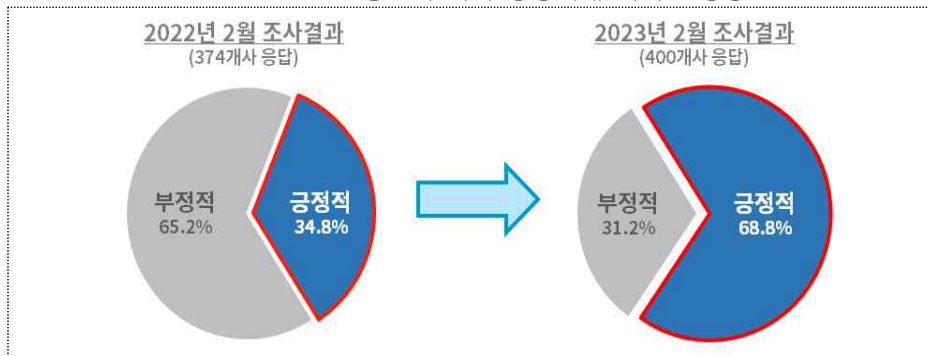
- 상의조사... ‘탄소중립,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’ 응답 기업 1년 새 2배 증가(35%→69%)
- 감축수단·기술적 한계 여전... 중소·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호소
- 정부 중점과제 : ▲투자자금 지원 ▲제도개선 ▲감축기술 지원

최근 1년 사이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최태원)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(배출권거래제,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1,000개사 중 400개사 응답)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응답기업의 68.8%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. 지난해는 긍정적 평가가 34.8%에 불과했으나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.

‘경쟁력 약화 위기’ (23.5%) 또는 ‘업종 존속 위기’ (7.7%) 등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업은 31.2%였다.

〈그림 1〉 탄소중립이 자사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



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. 응답기업의 81.5%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,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18.5%에 불과했다.

대한상의 관계자는 “최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와 함께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, 제4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(2026~2030년) 조기 수립 등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추진이 긍정적 평가의 요인” 이라고 풀이했다.

특히 기업이 정부와 계약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인 탄소차액계약제도(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, CcD)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에 응답기업의 90.3%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 <‘부정적’ 9.7%>

### 감축수단·기술적 한계 여전... 중소·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호소

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6.0%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‘탄소감축 설비 투자계획이 있다’고 응답했다. 반면 34.0%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투자 분야로는 ‘에너지효율 개선’이 68.2%로 가장 많았고 ‘재생에너지 사용’ (24.2%), ‘폐열 회수’ (18.6%), ‘연료 전환’ (11.7%), ‘공정가스 감축’ (8.3%), ‘자원 순환’ (7.6%), ‘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(CCUS)’ (2.7%) 순으로 나타났다. <복수응답>

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‘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’ (42.5%)을 가장 많이 꼽았고, ‘감축수단·기술 부족’ (33.1%), ‘배출량 감소로 투자 불필요’ (11.9%), ‘배출권 가격 등 투자 인센티브 불확실성’ (8.8%) 순으로 나타났다. < ‘투자 대신 배출권 구매 계획’ 3.1%, ‘기타’ 0.6%>

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, 대기업은 ‘감축수단·기술 부족’ (34.8%)을, 중소·중견기업은 ‘투자자금 조달 어려움’ (45.3%)을 가장 많이 꼽았다.

<표 1> 투자계획 없는 이유

구분	대기업	중소·중견기업
1순위	감축수단·기술 부족(34.8%)	투자자금 조달 어려움(45.3%)
2순위	투자자금 조달 어려움(26.1%)	감축수단·기술 부족(32.8%)
3순위	투자 인센티브 불확실성(17.4%)	배출량 감소로 투자 불필요(10.9%)

국내 대기업 A社は “현재 알려져 있는 감축기술의 대부분이 현장에 이미 적용된 상황이라 추가적인 감축에 한계 있다” 며 “고효율 설비, 탄소포집 효율향상, 수소 생산기술 등 새로운 감축기술 개발과 실증이 시급하다” 고 설명했다.


중소기업 B社は “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본인 분담률이 높고, 기존 시설 철거, 건물 공사, 토지구입 등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” 고 호소했다.

기업들, 탄소중립 위한 정부 중점과제로 ▲투자자금 지원 ▲제도개선 꼽아 ▲감축기술 지원

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부 정책과제로 ‘투자자금 지원 확대’ (33.0%), ‘제도 개선’ (24.0%), ‘감축기술 개발·보급’ (17.9%), ‘투자 인센티브 확대’ (12.8%), ‘기후테크 기업 육성’ (9.0%) 순으로 꼽았다. < ‘피해 사업·노동자 지원’ 3.1%, ‘기타’ 0.2% >

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는 “탄소중립 혁신기술은 대부분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중요하다” 며 “정부가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에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 등 혁신기술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” 고 주장했다.

한편, 유럽연합(EU)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에 대비한 지원 요청사항으로 응답 기업들은 ‘제도 설명 및 정보 제공’ (30.1%)을 가장 많이 꼽았다. 이어서 ‘대응전략 수립 지원’ (20.6%), ‘배출량 상호인증 등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’ (17.8%), ‘대상여부 확인 등 안내데스크 운영’ (11.9%), ‘행정 대응지원’ (9.3%), 배출량 산정 지원(9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‘EU 수준으로 규제 상향’ 은 1.3%에 불과했다.

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“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당초 6조 7천억 원에서 9천 3백억 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” 며 “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을 기회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10%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도 필요하다” 고 당부했다. 

< 조사 개요 >

- ▷ 기간 : 2023년 2월 14일(화)~21일(화)
- ▷ 대상 :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&목표관리제 대상기업(약 1,000개사 중 400개사 응답)
- ▷ 방법 : 전화, E-mail, 팩스